
2022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21. 12.



해양수산부



목 차

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| 1 |
| II.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| 6 |
| III. 2022년 해양수산부 핵심 추진과제 | 8 |
| 1.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 | 9 |
| 2. 어촌소멸 선제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| 12 |
| 3. 탄소배출과 재해가 없는 해양수산 구현 | 15 |
| IV. 2022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| 20 |

I.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

1 해운재건의 가시적 성과 창출

□ 추진실적

- ❶ (해운재건계획) 한진해운 파산('17.2) 이후 해운재건을 위해 「5개년 계획」 수립('18.4), 한국해양진흥공사(이하 해진공)* 설립('18.7)으로 총력 지원
* 선박금융(S&LB) 등의 방식으로 93개 해운기업의 자산 확보, 경영 안정 등에 6.5조원 지원
- ❷ (국적선대 확충) 국적선사에서 초대형 '컨'선 20척(2.4만TEU급 12척, 1.6만TEU급 8척) 포함 총 274척을 신조 발주('18.1~'21.10)
* 전체 발주량 274척(203억 달러) 중 208척(167억 달러)을 국내조선사에 발주
- ❸ (선사경쟁력 강화) HMM은 ^{세계 3대 해운동맹} THE Alliance 가입 및 협력 개시('20.4~), 아시아 '컨'선사는 항로 구조조정 등* 경쟁력 강화 추진
* 항로 구조조정('17~'18, 3회), 한국해운연합('18)·K-얼라이언스('21) 결성, 장금상선·흥아해운 통합('19)
- ❹ (미래기반 마련) 해운산업 리더국가 전략 수립('21.6), 자율운항선박 개발 추진('20~),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예타 통과('21.11) 등 미래 도약기반 마련

□ 정책효과

- ❶ (해운경쟁력 회복) 해운재건계획 실행으로 한진사태 이전 수준의 매출액 및 선복량을 회복하고, 해운-조선 상생 발전기반 마련

| < 구 분 > | 한진사태 전 | 한진사태 후 | '21년(추정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해운 매출액(원) | 39조('15) | 29조('16) | 40조 |
| 원양 선복량(TEU) | 105만('16.8) | 46만('16.12) | 105만(신조 포함) |
| 지배선대(DWT) | 8,586만('16) | 7,994만('17) | 9,338만 |

- 대표 국적선사인 HMM은 10년 만에 흑자전환*('20), 미주·유럽 노선**의 국적선사 점유율이 '16년말 대비 2배 이상 증가('21)

* ('17) △4,058억원→('20) 9,808억원 / ** ('16.12 대비 '21.8) 미주 3.9→8.4%, 유럽 2.6→7.2%

- 조선업도 13년만의 최대 수주량을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를 시현('21)

- ❷ (수출입물류 지원) 임시선박 투입('20.8~), 중기전용 선박(1,300TEU/항차)* 등 지원으로 글로벌 물류난에 대응하고, 수출 신장을 뒷받침

* '20.8~'21.11 실적: (임시선박) 86척 투입 19.8만TEU 수송 / (중기전용 선박) 100회 1.5만TEU 지원

-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* 허브항만('컨' 처리 기준 세계 7위)으로, 광양항은 세계 11위** 종합물류항만으로 성장

* '컨' 환적물량 1,202만TEU('20년, '컨' 처리물량의 55%) / ** 세계 11번째 年 물동량 3억톤 돌파('18년)

2 수산업 혁신 및 어촌·연안 활력 제고

□ 추진 실적

- ❶ (수산·어촌혁신계획) 수산업 전주기 혁신, 어촌소멸 선제 대응을 위해 수산혁신 2030 계획*('19.2),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('21.9) 수립
* 자원관리형 어업 정착, 친환경 양식 육성, 유통·가공 시스템 혁신,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
- ❷ (친환경 어업) ^{총허용어획량}TAC 중심의 자원관리 체계 확립(11→15종^{시범포함}), 어선 감척(1,410척), 불법어업 단속 확대, 수산자원 조성으로 환경공존형 수산업 확립
- ❸ (수산식품산업 육성) 수산식품클러스터(전남·부산) 조성 추진, 「수산식품산업법」 제정('20.2), 유통혁신로드맵('18.6) 수립 등 경쟁력 강화 지원
- ❹ (어촌정주여건 개선) 어촌뉴딜300* 신규 추진('18~), 수산공익직불제** 시행('21), 농어업 세제불균형 해소('20) 등 생활 SOC, 소득기반 확충
* 어촌·어항 300개소에 생활 SOC 확충 / ** 조건불리지역·자원보호·친환경생산·경영이양
- ❺ (해양관광 등 활성화) 「해양치유법」·「항만재개발법」('20) 등 기반 강화와 인프라 조성* 등으로 해양관광 및 항만재개발 활성화 추진
* 해양레저관광거점(5개소)·해양치유센터(4) 조성, 부산 북항/인천 영종도 항만재개발 등 추진

□ 정책효과

- ❶ (생산성·생태계 회복) TAC 중심의 자원관리와 수산자원 조성 확대로 연근해 어업 경영여건이 개선*되고, 바다사막화 해소 등 생태계도 회복**
* 어선당 어업이익('17→'20, 만원) : (근해) 30,702 → 37,980 / (연안) 3,454 → 4,794
** '17~'21년간 바다숲 1.2만ha 추가 조성으로 여의도 면적 8배 바다사막화 해소, 연간 4.9만톤 CO₂ 저감
- ❷ (어가소득·수출경쟁력 향상) 생산·유통·가공 단계의 고부가가치화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 진입*
* 어가소득(만원) : ('17) 4,902 → ('18) 5,184 → ('19) 4,842 → ('20) 5,319
- K-FISH 마케팅, 온라인·비대면 등 전방위 수출 촉진 지원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수출액 역대 최고실적 달성*
* 수출액(억달러) : ('17) 23.3 → ('19) 25.1 → ('21) 11월 25.3 (연말 전망 28)
- ❸ (연안경제 활력제고)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, 항만재개발 등 적극 추진으로 연안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

3 해양환경·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기반 마련

□ 추진실적

- ❶ (해양수산 탄소중립 추진) 탄소배출 네거티브(-323.7만톤)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 로드맵*을 수립('21.12)하여 탄소중립 추진체계 확립
* ①선박 탄소배출 최소화, ②친환경 수산·어촌 터전 마련, ③해양 재생에너지 확대, ④해양 탄소흡수·저장원 확대, ⑤탄소중립항만 구축, ⑥해양폐기물 저감·재활용 확대
- 「친환경선박법」('18.12)·「항만대기질법」('19.4) 제정, 2030 그린쉽-K 추진전략('20.12) 및 수소항만 조성방안('21.11) 수립 등 추진
- ❷ (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저감) 「해양폐기물법」 제정('19.12) 및 제1차 기본계획 수립*('21.5), 친환경부표 보급(누적 2,130만개) 등 전주기 관리 강화
*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'18년 발생량(6.7만톤) 대비 '30년 60% 저감, '50년 제로화 목표
- ❸ (후쿠시마 원전 오염수) 연안해역·수산물 등 방사능 조사 확대, 수입수산물 유통이력·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등 해양수산 대응방안 수립('21.4)·추진
- ❹ (해양공간 관리강화) 「해양공간계획법」('18.4) 및 「극지활동 진흥법」('21.4) 제정, 바다모래 수급·해상풍력 발전 관련 어업인·업체 간 상생방안* 마련
* 골재수급 안정대책(해수부·국토부, '17.12), 해상풍력 상생·발전방안(해수부·산업부, '20.7)
- ❺ (해양생태계 관리) 「갯벌법」 제정('19.1) 및 제1차 갯벌 기본계획 수립('21.7), 해양보호구역 확대('16년 20개소 496km²→'21년 32개소 1,798km²(누적))

□ 정책효과

- ❶ (해양환경 건강성 회복) 선박 친환경화 및 항만 미세먼지 저감*, 해양폐기물 관리체계 확립 등을 통해 해양환경의 건강성 회복 추진
* 주요 항만도시 초미세먼지 농도('16→'19, $\mu\text{g}/\text{m}^3$) : (부산) 27→21 (인천) 26→23 (울산) 23→20
- ❷ (해양공간 통합관리) 전해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계획에 기반한 선(先)계획 후(後)이용 통합관리체계를 구축*하고, 극지활동 확대 기반** 마련
* 갈등이 최소화되는 입지에서 해양이용행위가 이루어져 사회적 비용과 시간 절감
** 특히,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가 확정('21.6, 예타통과)되어 극지 과학연구 도약 기대
- ❸ (해양생태계 보전) 한국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기능 규명*('21.7) 및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** 등재('21.7) 등 해양생태계 보전 기반 마련
* 연간 26만 톤의 CO₂ 흡수(승용차 11만대 분) 등 / ** 총 20만ha(서천·고창·신안 등 갯벌)

4 해양안전 관리 선진화

□ 추진실적

- ❶ (안전제도 강화)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정('19.8) 및 「낚시관리법」 개정('19.8), 위험물선박 제도 개선('20.12) 등으로 선박사고 예방 강화

* (어선) 기상특보시 출항제한·위치보고 강화, 기상악화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(낚시어선) 안전요원 승선(13인 이상, 야간항해), 선장자격 및 안전성 검사 강화 등 (위험물선박)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 대상 방폭장비 확대 등

- ❷ (안전조직·인력 보강)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('19.7), 어선안전 정책과 신설('20.3) 등 안전관리 전담조직 강화

-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자 증원(106→142명), 국민안전감독관 운영(15명)

- ❸ (안전장비 보급·개발) 어선 화재사고 예방·저감을 위해 화재탐지 경보장치를 1만 4천척에 보급('20) 및 육상용 소화기 사용 허가('20.2)

-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어선 위치확인시스템('20), 표준어선형 개발('21)

- ❹ (안전문화 확산) 여름철 해양안전체험장 운영('18~'21, 워터파크 등), 해양안전체험관(안산) 개관('21.6~), 국민해양안전관(진도) 건립('21.12. 준공)

- ❺ (디지털 해양교통관리)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통해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(S-100) 기반의 바다 내비게이션* 서비스 세계 최초 시행('21~)

* 충돌·좌초 위험경보, 실시간 전자해도, 해양기상 및 해양안전정보 제공 등

□ 정책효과

- ❶ (해양사고 피해감소) 안전제도·관리 개선을 통해 이전 3년('15~'17) 대비 최근 3년간('18~'20) 사망·실종 등 인명피해 10% 감소(363→326명)

- ❷ (안전의식 고취) 여름철 해양안전체험장 운영(2만여명 교육) 등을 통해 안전한 바다활동 필수교육을 제공하여 해양안전 국민의식 향상*

* 일반국민 해양안전수칙 준수도(1천명 설문, 100점) : ('18) 75.0점 → ('21) 83.7점(11.6%↑)

- ❸ (디지털 해양안전관리) 바다 내비게이션, 어선 위치확인시스템 등 디지털 해양안전관리를 시행하고, 독도·동해 영토주권 확립*에 기여

* 제2차 국제수로기구(IHO) 총회('20.11)에서 기존 해도표준(S-23, 일본해 표기)을 대체하는 디지털 해도표준(S-130, 지명표기 없이 고유번호로 해역 표기) 개발 결정 → S-100 기반 주도권 강화

5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적극 대응

□ 추진실적

- ① (코로나 방역·업계지원) 승선진단검사,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(8개소) 등 항만 방역을 중점 추진하고, 해수욕장은 ICT 기반 방역관리* 실시

* 혼잡도 신호등(KT 등 협업), 사전 예약제, 체온 스티커 배포, 안심콜 등

- 해양수산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운·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총 3.8조원 규모의 지원대책*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('20~'21)

* (해운) 총 2.6조원('20. 1.7조원, '21. 0.9조원) / (수산) 총 1.2조원('20. 0.8조원, '21. 0.4조원)

- ② (포스트 코로나 대비)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('19.11), 해양신산업 혁신전략('19.10), 해양수산 2050 탄소중립 로드맵('21.12) 등 적극 추진 중*

* (분야별 전략)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('21.4), 2030 그림책-K 추진전략('20.12) 등

- 범부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(1차: '20.7 / 2차: '21.7)에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·그린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 집중 반영

| | |
|--------|---|
| 디지털 뉴딜 | 자율운항선박,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, 항만·어항 디지털 관리체계, 스마트 공동물류센터, 수출입물류 데이터 플랫폼, 해운-항만-운송 물류연계 최적화, 스마트 양식클러스터, 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기술 등 |
| 그린 뉴딜 | 해수부 관공선 친환경 전환, 민간선박 친환경 전환 보조,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, 갯벌 및 갯벌 식생 복원, 친환경 부표 보급, CCS 통합실증 및 상용화,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기술 등 |

-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, 디지털·그린 전환, 글로벌 공급망(GVC) 재편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 추진*

* 해양수산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('20.7) 수립, 「항만법」 개정('20.12, 유턴기업 지원) 등

□ 정책효과

- ① (코로나 피해 최소화) 적극적 항만 방역관리로 중단없는 수출입 물류를 실현하고, 해수욕장은 2년 연속('20~'21) 코로나 감염 제로 달성

- 긴급경영자금 지원, 수산물 소비촉진 등 과감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해양수산업계의 코로나 피해 최소화 기여

- ② (창업·혁신 촉진) 창업투자, R&D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디지털·그린·바이오 등 혁신산업 분야 유망기업의 창업·성장 촉진*

* 해양수산 창업·투자 지원으로 158개사 창업, 1,345억원 투자 유치, 6,079명 신규 고용 창출('17~'21.10)

-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혁신 기반 마련 및 착수

Ⅱ.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 업무추진 여건

□ 국가적 비상경제 상황에서 해운산업의 역할 긴요

-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되살아난 해운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, 수출입물류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뒷받침*

* 우리나라 수출입물동량(전년비) : ('20.1~12) 12.7억톤(△10.8%) → ('21.1~10) 11.2억톤(+6.0%)

- 다만, 해운산업이 계속되는 수출입물류난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*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과 투자를 더욱 확대할 필요

* 주요국의 경기부양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시황 개선에 힘입어 글로벌 선사들은 신조 발주 확대 등 적극적 투자 추진 중

□ 어촌·연안의 소멸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 제기

-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가 본격화*되는 상황에서,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당수의 지역이 소멸 위험에 직면**

* '20년 인구 자연증가(출생-사망) : -3만3천 명(△0.6%) ※ 통계작성 이후 최초 자연 감소

** (행안부) 전국 226개 시·군·구 중 89개 시·군·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('21.10.19)

- 특히, 어촌은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*한 지역으로서, 어촌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

* '15년 대비 '20년 인구 증감률(%) : 전체인구 0.6 ↔ 농가인구 △9.9 ↔ 어가인구 △24.4

** 어촌지역 74개 시·군·구(29개 군) 중 30개 시·군·구(24개 군)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

□ 탄소중립과 탈(脫)플라스틱,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실행 본격화

-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상향안*('21.11), 분야별 탄소중립 로드맵('21.12~'22.1)이 마련되어, 탄소저감 대책을 본격 실행할 시점

* '18년 총배출량 727.6백만톤 대비 '30년 291백만톤 감축(436.6백만톤 순배출)

- 해양플라스틱이 기후변화에 준하는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, 국제논의*를 선도할 필요

* UN환경계획(UNEP) 등이 해양플라스틱 저감 관련 국제규범 제정 필요성 논의 중

-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용부 관리 → 해수부 관리 경사노위의 어선원 안전관리 개편 합의('21.11), 「항만안전특별법」('22.8. 시행)·「중대재해처벌법」('22.1. 시행) 제정 등으로 강화된 재해예방대책 실행 필요

2 업무추진 방향

□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로 도약 추진

※ (목표) '30년 해운산업 매출액 70조원,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50만TEU 달성

- 국적선사의 선대 확충과 경영혁신을 위한 범부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, 스마트 해운물류시스템 도입 가속화
- 스마트항만 등 미래 항만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, 해외 물류거점 등을 추가 확보하여 촘촘한 해운물류 네트워크 구축
-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와 전략물자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해상수송을 적시 지원하고, 해운산업과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도모

□ 어촌·연안지역과 수산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

※ (목표) '30년 수산업 매출액 100조원, 어가소득 8천만원 달성

- 어촌 생활공간을 혁신하고,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·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어촌소멸을 방지
- 수산식품산업, 어선어업,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인프라 확충, 제도 개선 및 스마트·친환경 전환 추진
- 해양관광 제도 및 인프라 보강, 지역별 항만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연안지역의 활력 제고

□ 탄소배출이 없고 재해에서 안전한 해양수산 실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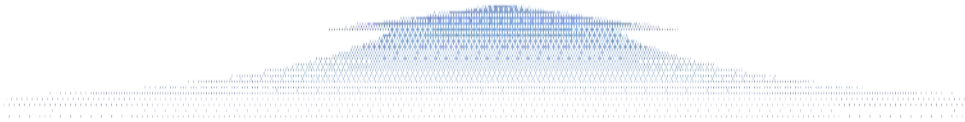
※ (목표) '50년 해양수산 탄소배출 네거티브(-), 해양플라스틱 발생 제로 달성

- 해양수산 전분야의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탄소흡수원을 적극 발굴하여 2050년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
- 해양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 발생-수거-처리-재활용의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고, 탄소중립 및 해양플라스틱 국제협력 주도
- 어선사고 저감, 항만의 안전관리 강화,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국가의 책임 아래 해양수산 전분야 안전관리 강화 추진

☞ 해양수산의 선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바다에서의 혁신성장 실현

《 2022년 비전 》

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 실현



1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

1. 해운산업의 세계 선도 경쟁력 확보
2. 미래 항만인프라 선제 확충 및 운영 효율화
3. 수출입물류 지원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 지원

2 어촌소멸 선제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

1. 어촌지역 활성화 본격 추진
2.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
3. 해양관광 기반 강화 및 항만재개발 활성화

3 탄소배출과 재해가 없는 해양수산 구현

1. 해양수산분야 탄소배출 네거티브 추진
2.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추진
3.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수산 안전관리 추진

1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

1. 해운산업의 세계 선도 경쟁력 확보

① 국적선사의 선대 확충 및 경영혁신 지원

- (선대 확충) 주요 항로에 투입된 ^{2.4만TEU급 12척, 1.6만TEU급 8척} 초대형 '컨'선 20척에 이어, 지난해 신조 발주된 1.3만TEU급 '컨'선 12척의 신속한 설계·건조 지원(해진공)
 -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총 21억달러 규모의 신조 지원 프로그램*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추가 선박 확보 적극 지원
 - * 해진공산업은행 등 신조 지원 프로그램(15억달러), 해진공산업은행 친환경선박 투자펀드(6억달러)
 -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규 건조 시 고속 감가상각률을 적용 (법인세 절감 효과)하는 선박 조세리스 제도(日·프 시행 중) 도입 추진*
 - * 조세특례 예타 대상 선정 및 예타('22.1~7) → '22년 세법 개정안 반영('22.7~11) 추진
- (경영 지원) HMM의 선대·항로·물류기반 확대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해진공 중심으로 HMM 관리체계 개편 검토(해진공·산은 등 협의)
 - 동남아항로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'K-얼라이언스'의 안정적 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자산 투자, 협력항로 확대 등 본격 지원
- (공정거래질서 확립)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운 공동행위 관리·감독 체계 정립을 위해 '해운시장 질서 확립방안' 마련*('22.上)
 - * 공정위 등 협의를 거쳐 해운 공동행위 등에 대한 관계기관 역할 정립, 절차·기준 개편, 법령·규정 개정 등 질서 확립방안 마련 및 추진

② 스마트 해운물류시스템 도입 촉진

- (자율운항선박) 핵심기술 개발, 시험선 건조, 실험역 실증 등 상용화 시스템 및 입출항 관제 등 스마트항만 연계시스템 개발(~'25)

-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·실증,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「자율운항선박 개발·상용화 촉진법」 제정 추진
- (스마트물류) 수출입 물류데이터 통합관리·공유 플랫폼 운영을 개시하고, 블록체인 기반 항만 정보공유 플랫폼*을 주요 항만으로 확산
 - * (내용/도입) '컨' 반출입 배차예약 등 / 부산항('22.上) → 인천항·여수광양항·울산항('22.下)
- 인천항·부산항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*를 조성하고, 선박-항만-육상물류 간 물류연계 최적화 시스템 신규 개발 착수('22~'25)
 - * (인천항) 설계 및 착공('22) → 완공('23) / (부산항) 설계('22) → 공사('23~'24)

2. 미래 항만인프라 선제 확충 및 운영 효율화

①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 등 항만인프라 혁신

- (스마트항만) 부산항 '컨' 물동량 증가 등에 대비, 한국형 스마트 메가पोर्ट로 개발 예정인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사전절차 실시*
 - * 예타 통과 시, '22년 기초조사 등을 시작으로 '31년까지 '컨' 부두 9선석 개발(1단계)
- 자동하역·이송기술 개발*과 더불어,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** 구축('22~'26)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항만 기술의 실증·상용화 추진
 - * 컨테이너 자동하역시스템('19~'23),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이송시스템('22~'24) 등
 - ** (규모/장비) '컨' 부두 4선석 / 자동화 크레인 43대(C/C-ARMGC), 자동이송장비 44대(L-AGV) 등
- (거점항만) 부산항·인천항·광양항 등의 부두 증설 및 신규 터미널 개장*, 중장기 운영 로드맵 수립을 통해 항만물류·운영 효율화
 - * (부산신항) 남'컨' 부두 3선석('22.6월 개장), 서'컨' 부두 5선석('23년 및 '26년 개장) (인천신항) '컨' 부두 3선석('26년 개장) / (광양항) 석유화학부두 2선석('22.12월 개장)

② 항만배후단지 및 해외 물류거점 확충

- (항만배후단지) '30년까지 약 33km²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4차('22~'30)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('22.12)

- 인천항(전자상거래·콜드체인), 부산항·목포항(복합물류·제조) 배후단지에 우수기업 유치 및 인천항 배후단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추진
- (해외 물류거점) 로테르담항('22.1), 바르셀로나항·프로볼링고항('22.上)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완전 개장하고, 추가 물류거점 확보 추진(美·베 등)

3. 수출입물류 지원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 지원

① 수출입물류 및 전략물자 수송 지원

- (수출입물류)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 투입(월 4척 이상), 중소화주 전용선복(항차별 900TEU 이상)을 지속 제공(물류상황에 따라 탄력 지원)
- 부산항 수출화물 보관장소를 확충('22.2, 9,550 → 12,050TEU)하고, '컨' 박스 추가 공급(40피트 기준 최대 1만대) 및 한국형 해운운임지수 개발(해진공)
- 장기운송계약 활성화를 위해 우수선화주 인증기업(화주)의 법인세 감면혜택 확대*와 계약이행보증 지원 확대(벌크+컨) 추진
- * 매출액 100억원 이하에도 법인세 감면 허용, 국적선사 이용비중별 감면 혜택 차등화 등
- (전략물자 수송) 요소(수) 등 수급 원활화를 위해 해상운송·항만하역을 적시 지원하고, 비상상황 대비 국가필수선대 규모 확대 검토
- 국적선사의 안정적 전략물자 수송을 위해 공기업 입찰·계약제도 개선* 및 종합심사낙찰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관계기관 협의
- * 무역거래조건 변경(선사수배 책임 : 매도인(DES) → 매수인(FOB)), 국내제한입찰 도입 등

② 항만연관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

- (항만서비스 품질 향상) 「항만운송사업법령」을 개정하여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(검수·검량 등 일괄 제공) 및 표준계약서 사용 추진
- (연관산업 지원 강화) 외항선에 공급하는 선용품·선박수리 용역을 수출로 인정하여 수출금융 등 지원('22.1, 산업부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개정 시행)
- 항만연관산업에도 해진공 지원이 가능하도록 「해진공법」 개정 추진

1. 어촌지역 활성화 본격 추진

① 어촌·도서지역의 생활공간 혁신 가속화

- (어촌뉴딜 확산) 어촌뉴딜300 신규 사업지 50개소를 본격 추진하고, 전체 사업지의 50% 이상 준공('21. 33개소 + '22. 117개소 이상) 추진
 - 주거·일자리 지원 연계 **포스트 어촌뉴딜** 어촌활력증진 사업 시범사업(6개소)을 시행하고, 소득·정주여건·생활SOC 거점을 구축하는 포스트 어촌뉴딜 추진전략 마련('22. 上)
- (섬주민 교통기본권 보장) 소외도서(여객선 미기항 등)에 대한 항로 운영 지원* 및 국가보조항로의 공영제 전환 방안 검토
 - * 지자체 선박 투입(비용 일부 국비지원), 국가보조항로 기항지 추가 등
 - 도서민 여객운임(現 최대 7천원)을 육상대중교통 수준(1,350~2,650원)의 단일운임 체계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

② 어촌유입·정착을 위한 일자리 등 지원 강화

- (일자리 창출) 어선어업 창업 청년에게 어선 임차료를 지원(50%)하는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(10척)을 신규 추진하고 활성화방안 모색
 - 신규 귀어인에 어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양식면허제도를 개선* (「양식산업발전법」 개정)하고, 마을어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마련
 - * 공공임대형 양식면허 신설, 양식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신규전입자 반영 등
 - 어촌체험휴양마을(118개소)의 특화마을 조성('22. 해양치유 2개소 → 유형·개소 확대), 귀어귀촌 창업·정착자금 지원 강화 등으로 취·창업 지원 확대
- (투자 활성화) 어촌지역 자산(어선·양식장·주거단지 등)에 펀드 방식의 투자참여시 '준귀어인' 지위를 부여하는 간접투자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
 - 국가어항에 민간투자 활성화*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(「어촌어항법」 개정)
 - * 어항시설 확대, 어항개발계획 민간제안, 어촌관광구역 투자기회 확대 등

- (소득·주거 지원) 수산공익직불제 지원대상 확대(조건불리지역 : 도서·접경지역 → 연륙섬, 어선원 포함)와 기본형 직불제(전체 어업인) 도입방안 검토('22~'23)
- 귀어정착 단계별 주거 안정을 위해 귀어인의 집(계획 단계, 시범 6개소), 빈집 리모델링(정착준비, 시범 3개소), 주거플랫폼(장기거주, 국토부 협업) 지원

2.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

① 비대면 중심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수산식품산업 육성

- (식품산업·유통) 신선유통 확대를 감안하여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(~'25, 부산·전남)하고, 중소 수산식품단지 조성 확대(15→19개소)
- 위판장 현대화-폴필먼트 투자모델(시범 2개소),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, 스마트 신선유통·가공 R&D(~'25)도 적극 추진
- (소비·수출)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(200억원, 20% 할인)으로 소비를 촉진하고, 「수산물유통법」 개정으로 직거래 활성화
- K-씨푸드관(주요국 온라인몰, 5→7개) 확대, 맞춤형 현지 시장조사 및 판로 다변화(해외외식업체 등) 지원으로 수산물 수출 촉진

② 어업규제 합리화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어선어업 실현

- (TAC 운영) TAC 확대*와 함께,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(1·2차) 지속 추진,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업계 수용성 제고
* ('21) 12개 어종, 14개 업종 → ('22) 15개 어종(+ 갈치·참조가·삼치), 18개 업종(+ 근해연승 등)
- (어선 감척)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한 감척사업('22. 근해 73, 연안 163)의 수용성 향상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확대*하고, 사업효율화 방안 마련
* 폐업지원금 산정기준(평년수익액 대비) : ('20) 70% → ('21) 90% → ('22) 100%
- (금어기 등) 금어기·금지체장 제도의 자원회복 효과, 어가소득 영향을 분석하여 업종·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('22.上)

③ 스마트·친환경 기반의 양식산업 고도화

- (스마트양식)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5개소,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2개소*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여 스마트양식 정착기반 확립
 - * (스마트양식 클러스터) 부산('22년 준공), 강원, 경북 포항, 경남 고성, 전남 신안 (내수면 스마트양식장) 충북 괴산, 전남 화순
- 우수식 디지털양식 혁신기술, 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 기술 등 양식기술 첨단화를 위한 기술개발 신규 추진('22~'26)
- (친환경양식) 친환경 배합사료 ^{총 사용량의 18%} 연간 3만톤 생산이 가능한 사료 공장을 신축('22~'24)하고, 배합사료 어분의 안정적 공급방안 마련
- 과밀·노후화된 어장 4개소(전남·경남 각 2개)를 청정어장으로 재생하고, 「수산부산물법」 시행('22.7) 및 부산물 자원화·재활용 기본계획 마련

3. 해양관광 기반 강화 및 항만재개발 활성화

①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해양관광 기반 강화

- (기본법 제정) 해양관광 수요 증가 및 다양화에 따른 체계적 해양관광 정책 추진을 위해 「해양관광 활성화 기본법」(가칭) 제정 추진
 - * 현재 「해양수산발전기본법」 제28조(해양관광의 진흥)가 유일한 기본법적 근거
- (인프라 조성) 해양치유센터(4개소)·해양레저관광거점(5개소)·마리나 인프라(8개소)를 신속히 조성하고, 가로림만 해양정원* 타당성 조사 추진
 - * 가로림만 등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「해양생태계법」 개정 병행

② 항만재개발 추진으로 지역 경제활력 증대

- (부산항 북항) 1단계는 주요 ^{친수공원 등}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 개방하고, 2단계는 예타 등 적기 이행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적극 지원
- (인천항) 영종도 종합관광레저단지 부지는 연내 준공하고, 내항 1·8부두는 재개발 사업계획 보완 후 실시협약 체결 및 예타 추진
- (광양항 등) 묘도 재개발, 고현항 재개발 사업 등도 신속하게 추진

1. 해양수산 탄소배출 네거티브 추진

① 해양수산 전분야 탄소배출 저감

① 해운·항만분야 탈탄소화

- (해운) 저탄소 ^{LNG, 하이브리드 등} 선박기술 고도화, 무탄소 ^{수소, 암모니아 등} 선박기술 상용화를 위해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('22~'31) 신규 추진
 - 공공선박 58척의 친환경 전환 추진, 민간선박에 친환경 전환 지원 강화*로 해운분야 친환경 전환 가속화('30년까지 총 528척 전환)
- * 해진공·산업은행 친환경선박 투자펀드(6억달러), 내항선 친환경 전환 보조율 상향(20→30%) 등
- (항만) 하역장비(YT·TC 등)의 친환경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, 항만 인프라의 탄소저감 추진방안 마련(신재생에너지 활용, 저탄소 건설기술 적용 등)
 - 항만 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소항만 기본계획 수립('22~'23), 「수소항만법」 제정 및 시범사업(광양항·부산신항) 추진

② 수산·어촌분야 탄소중립 실현

- (탄소저감) 어선 감척, 노후어선 설비 교체 및 친환경 ^{전기복합 등} 어선 개발, 양식장 스마트화 및 친환경설비 보급으로 어업 저탄소화
 - 수산물 유통·가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장비 보급(히트펌프 등), 친환경 냉매 사용 촉진 및 스마트화 기술개발·지원 병행
- (재생에너지) 양식장, 국가어항의 유휴부지와 유휴수역을 활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(태양광·소수력 등) 생산기반 구축 추진

② 블루카본, 해양에너지 등 탄소흡수·감축원 발굴

① 블루카본을 통한 탄소흡수 확대

- (자원 확대) 갯벌 복원 사업지를 확대(계속 3개소+신규 2개소)하고,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갯벌 식생복원 시범사업(4개소) 신규 추진*
 - * '50년까지 갯벌 복원 30km² 및 갯벌 식생복원 총 660km² 추진
- 바다숲 2,386ha를 추가 조성(누적 '22. 2.9만→'30. 5.4만ha)하고, 사후관리 강화
- (통계기반) 블루카본의 분포 현황 및 탄소흡수량을 계량화·DB화 하는 블루카본 통계기반 구축 본격 추진
 - 블루카본의 탄소흡수력을 2030 NDC ^{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}상향안('21.11)에 더하여, 국가 온실가스 통계, IPCC(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) 지침에도 반영 추진*
 - * 現 IPCC 지침(식생갯벌만 인정)에 의거, 국가통계에 식생갯벌(연안습지 항목 신설), 비식생갯벌·바다숲(메모항목 작성) 반영 + 국제협력을 통해 IPCC 지침 개정 및 국가통계 반영 확대
- (R&D 등) 대륙붕 등 신규 블루카본을 발굴하기 위한 R&D('22~'26)를 신규 추진하고, 블루카본 확산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및 홍보 강화

② 해양에너지 개발·상용화로 탄소 감축

- (조류·파력) 조류발전 설비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실험역 검증, 파력발전 시스템(연안·항만 방파제 활용)을 시운전하여 고도화 추진*
 - * (조류) 대형설비(1MW급), 도서지역 소형설비(100KW급), / (파력) 30KW급(제주)
- (조력) 이미 상용화한 시화 조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을 40% 확대(254→356MW)하기 위한 인프라 증설 타당성 조사 추진('22~'23)
- (해양그린수소) 파력발전(제주 용수리) 전력으로 해수를 담수화·수전해 하여 청정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기술개발 추진('22~'25)
- (해양바이오수소) 심해 해양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수소 실증플랜트 고도화(1톤 생산) 및 운영 최적화를 통한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(~'23)

③ 해양분야 탄소포집·저장(CCS) 기반 구축

- 대규모(1억톤) CO₂ 저장 후보지를 선정하고, CCS 해외수출 지원 및 국내저장 관련 해양환경 영향 등 대응방안 수립

③ 해양수산 탄소중립 추진기반 강화

- (협력체계 구축) 한-아세안 해양장관회의 설립, 블루카본 국제포럼, 한-인니 블루카본 공동연구 등 글로벌 탄소중립 협력을 선도
 - 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 시범사업*(2개소)을 신규 추진하여 연안지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탄소중립 추진 지원
- * 지자체별로 대표모델(배출저감, 재생에너지 전환, 탄소흡수 강화) 구축 → 전국 확산 추진
- (기후변화 예측) 전지구 해양, 한반도 해역의 기후변화를 관측하고 예측모델·시나리오를 마련*하여 탄소중립,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
- * 해양기후변화 통합관측 장기전망 기반구축('22~'26), 대양관측망 확대('22~'26) 등
-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('22~'26), 극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('22~'25) 등을 통해 극지 기인 기후변화 연구역량 강화

2.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추진

① 해양폐기물 발생 사전 예방

- (친환경 어구·부표) ^{스티로폼부표 대체} 친환경 부표를 1,100만개 이상 신규 보급*하고, 스티로폼 부표 사용금지 제도를 단계적 시행**(어업인 홍보·간담회 병행)
- * 보급 목표(누적) : ('21) 2,130만개(39%) → ('22) 3,272만개(59%) → ('24) 5,500만개(100%)
- ** 친환경 부표 공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: 감·굴 등 양식장('22.11~) → 기타 양식장('23.11~)
- 탈(脫)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차세대 친환경 부표를 개발('22~'26)하고,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 확대 및 품질 강화(생산공정 이력제 시범사업) 추진
- (어구·부표 회수·저감) 어구실명제, 어구일제회수제, 어구·부표 보증금제 시행('23~)을 준비*하고, 항·포구 집하장 추가 확충(76→106개소)
- * 「수산업법」 전부개정('21.12월 국회 본회의 통과)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등
- 어구실명제 등과 연계하여 전자어구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(기획연구) 하고, 부표 사용량이 적은 개체굴 양식 공동생산시설 지원(3개소)
- (해양 미세플라스틱) 연안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, 발생원인 규명 및 환경권고 기준 마련('22~'26)

②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·재활용 촉진

- (수거 확대)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6척을 준공하여 현장에 투입하고, 바다환경지킴이 활동 지원규모 확대(年 1,000→1,200명)
 -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폐기물 모니터링·수거지원 기술을 개발(~'24)하고, 해안쓰레기·미세플라스틱 수거장비 개발·실증 적극 추진
 - (처리·재활용 강화) 육상에서 폐기물 처리 한계 극복을 위해, 친환경 해상처리 방안 마련 및 One-stop 해상처리 친환경선박 개발('22~'26)
 - 폐부표 등의 재활용 및 새활용(Up-Cycling) 촉진을 위한 공모전 등을 활성화하고, 도서·어촌 자원순환 모델* 개발(~'24) 추진
- *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재활용·에너지화하여 지역사회 순환 공급

③ 해양폐기물 제로화 거버넌스 확립

- (국민참여) 바다의 날(5.31) 등 계기로 전국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을 실시하고, 민간 주도형 반려해변 확대(4→7개 지자체)
 - 대상별(어업인·낚시인·관광객 등)·연령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작·보급
 - (부처협업)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운영을 내실화(실무위·작업반 운영 등)하여 해양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한 협업과제 적극 발굴
 -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별도 항목으로 반영되지 않은 해양폐기물의 탄소중립 실적 계량화 및 국가통계 반영 추진(연구용역 실시)
 - (지자체협업) 해양환경의 연결성(해양폐기물이 해류를 타고 이동 등)을 고려하여, 인접 지자체 간 갈등 조정 및 협업 촉진 체계* 마련 추진
 - * 지자체 간 해양환경 갈등분쟁조정 방안 법제화 및 광역권 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 추진
 - (국제협력)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회의* 개최('22.9, 부산)를 통해 해양폐기물 국제협약 제정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'(가칭)부산 선언' 추진
 - * 우리부·UN환경계획(UNEP) 공동주최, 해양환경공단 주관
- 해양쓰레기가 주요 현안인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생애주기 관리방식의 ODA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 추진

3.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수산 안전관리 추진

① 사각지대 없는 항만안전체계 확립

- (항만안전특별관리) 「항만안전특별법」 시행('22.8)에 따라 전국 국가관리무역항의 372개 하역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대국민 공개
 - 항만안전점검관(39명) 배치, 재해예방시설 확충으로 안전작업 지원
- (재해안전항만) 해수면 상승, 태풍 빈발 등 기후재해를 예방하고 항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재해안전항만 구축계획 수립
 - 연안·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타당성 재조사 대응 등 적극 추진

② 어선원·어선 안전관리시스템 개편

- (어선원 안전·조업 관리) 경제노동사회위원회 경사노위 합의('21.11)에 따라, 어선원 안전·보건 관리제도 개편*(법 개정) 및 어선안전감독관(211명) 배치
 - * 「산업안전보건법」 → 「어선법」(어선설비 안전 기준), 「어선안전조업법」(어선원 안전확보 등)
 - 기상특보 시 조업 제한 등을 위해 「어선안전조업법」을 개정하고, 대형 어업지도선 신조 추진(3천톤급 3척 착공, 5천톤급 6척 예타 면제 추진 중)
- (안전장비·선박) 원거리어선 위치발신장치를 보급('20~'21. 802척 → '22~'23. 1,300척)하고, 수산기자재 안전성 향상을 위해 「수산기자재법」 제정 추진
 - 어선 안전성 강화를 위해 어선안전건조 관리시스템* 신규 도입 추진
 - * AI 어선안전건조 플랫폼 개발('22~'26), 어선건조업 관리제도 도입 추진(「어선법」 개정)

③ 해양수산 안전관리의 국가역할 강화

- (후쿠시마 원전 오염수)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, 범정부(국조실 주관) 대응과 함께, 해양수산분야 대응* 적극 추진
 - * 철저한 해양환경·수산물 방사능 검사, 수산물 이력제 개편,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등
- (중대재해예방)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시행('22.1)에 따라 해수부 사업장(약 6백개소), 인·허가 사업장(4.2만개소)의 중대재해예방대책 수립·실행
- (해사안전법제 개편) 국민의 해사안전기본권 법제화, 체계적 해사 안전관리를 위해 해사안전법제 개편* 추진
 - * 「해사안전법」 분법(→ 「해사안전기본법」·「해사안전관리법」 등), 「해상교통법」 제정

Ⅳ. 2022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| 3대 추진전략 | 2022년 주요 핵심과제 추진계획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①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.3만TEU급 '컨'선 12척의 신속한 설계 및 건조 지원,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21억달러 규모 지원프로그램으로 선박 신조 지원 ▶ 선박 조세리스 제도의 국내 도입 추진 및 해진공 중심으로 HMM 관리체계 개편 검토 ▶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운시장 질서 확립방안 마련 추진 ▶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제정 등 스마트 해운물류 도입 촉진 ▶ 부산항 진해신항,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등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 추진 ▶ 임시선박 투입, 중소화주 전용선복 지원 등 수출입물류 지속 지원 ▶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의 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및 계약이행보증 지원 확대 추진 ▶ 요소(수) 등 전락물자의 해상운송 등 신속 지원, 공기업 입찰-계약제도 등 개선 추진 ▶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, 외국적 선박에 선용품 용역 등의 수출인정 등 연관산업 육성 |
| ② 어촌소멸 선제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어촌뉴딜300 사업지의 50% 이상 준공 및 포스트 어촌뉴딜 추진전략 마련 추진 ▶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및 국가보조항로의 공영제 전환 방안 검토 ▶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, 양식면허·마을어업면허 제도 개선 등으로 어촌 일자리 창출 ▶ 어촌지역 자산 간접투자제도 도입,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제도개선 등 추진 ▶ 수산공익직불제 지원대상 확대 및 기본형 직불제 도입 방안 검토 ▶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, 위판장 현대화-필필먼트 투자모델 등 마련 ▶ TAC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, 어선감척 폐업지원금 확대 등 어업규제 합리화 ▶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및 유수식 디지털 양식 등 첨단 양식기술 개발 추진 ▶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신축, 청정어장 4개소 재생 및 수산부산물법 시행 준비 ▶ 해양관광 활성화 기본법 제정 및 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추진 ▶ 부산 북항, 인천 영종도 등 지역별 항만재개발 사업 적극 추진 |
| ③ 탄소배출과 재해가 없는 해양수산 구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및 공공선박·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▶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전환, 항만인프라 탄소저감 방안 및 수소항만 기본계획 마련 ▶ 어선, 양식장, 수산물 유통·가공시설에 친환경 설비 보급 및 스마트화 촉진 ▶ 갯벌 복원, 갯벌 식생복원, 바다숲 조성 등 블루카본 자원 확대 추진 ▶ 조류·파력발전 상용화, 시화 조력발전소 증설 타당성 조사 및 해양 청정수소 기술개발 ▶ 한-아세안 해양장관회의 설립, 탄소중립 오션뉴딜 시범사업 등 협력체계 구축 ▶ 친환경 부표 보급 및 차세대 부표 개발, 스티로폼 부표 사용금지 제도 단계적 시행 ▶ 어구실명제, 어구일제회수제, 어구 부표 보증금제 법제화 및 개체굴 양식 생산시설 지원 ▶ One-Stop 해상처리 친환경선박 개발, 재활용 공모전 등 해양폐기물 처리·재활용 촉진 ▶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, 반려 해변 확대 등 해양폐기물 줄이기 국민참여 강화 ▶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운영 내실화, 해양폐기물의 탄소중립 실적 계량화 등 추진 ▶ 항만하역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해안전항만 구축계획 마련 ▶ 어선원 안전·보건 관리제도 개편, 대형어업지도선 신조, 수산기자재법 제정 추진 ▶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, 중대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해사안전법제 개편 추진 |